李대통령 "주식 등 부동산 대체 투자 수단 활성화"

"금융시장 정상화 흐름 잘 유지해야"

대출 규제 강화 후 첫 발언 배경 주목

국무위원에 "임명권력, 선출권력 존중"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처음 나온 발언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무엇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배당을 늘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면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식을 비롯한 여러 투자처로 분산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집값 안정화와 국내 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인다.

실제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 촉진과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또 인공지능(AI) 전문가를 정부 요직에 발탁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AI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구조 개혁 방안이 성과를 낼 때까지 집값 문제가 국정 동력을 저하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해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아가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를 참고로 보시라", "개인적으로 (이 순위가)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 등 다소 강경하게 읽힐 수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여기에는 우선 이 대통령 스스로가 이번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명명한 만큼 집권 초반부터 이를 기반으로 한 권력 운영 기조, 특히 이른바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서열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은 선출 권력에 의해 발현되고, 이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도 (이 과정을 통해) 부여된다"고 규정한 것 역시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 정부 장관들에 대한 경고 또는 국정 운영에 협조해 달라는 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동시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구도라는 점과 자신이 지명한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잡음 없이 청문 정국을 건너가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진수 기자

지역민 수익 배분 '공익형 영농태양광' 뒷받침

주철현, 대선공약 '영농태양광법' 발의

햇빛소득마을·전남 영농형태양광 육성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사진)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태양광 보급과 확산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제정안은 발전사업 계획을 승인받으면 관련 규제들에 대해 인·허가를 의제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고 사업 승인 기간을 30년까지 허용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임차농 보호를 위해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의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농산물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전남 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또한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사업계획 승인 ▲생산된 전기 우선 구매 ▲발전설비의 설치와 송·배전설비 연결 혜택 부여 등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소득 향상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농업 소득 감소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농업인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의 농촌 곳곳에 조성되고 특히 전남에 영농형 태양광이 집중 육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행안위 '13조 소비쿠폰' 여야 합의 처리

원안서 '발행예산 20% 지방 부담' 삭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의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김진수 기자

道, 교육부 '지역인재 육성' 공모 선정

도교육청·8개 대학 등 협력 결실

5년간 총 21억5천만원 국비 지원

전남도는 1일 "교육부의 '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역에서 꿈꾸고 배우며 머무는 인재육성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지역인재전형 확대, 입학 전 교육과정 등 대학 입학 전후 단계의 지역 인재육성 모델 추진을 위한 2025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비수도권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5년간 지방비를 포함한 총 12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시범운영 사업이다.

이에 전남도는 전남도교육청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RISE센터), 8개 참여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8개 참여 대학은 국립목포대, 국립목포해양대, 국립순천대, 동신대, 순천제일대, 세한대, 초당대, 한영대다.

대학은 과제별 사업 추진계획 수립, 전남도교육청은 지원 방안 제시, 전남도와 RISE센터는 공모 사업계획서 작성을 담당하는 등 각 기관이 적극 참여했다.

그 결과 교육부의 서면·발표평가에서 전남도와 부산시, 강원도, 경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가 선정됐다. 선정된 곳은 매년 평균 국비 4억3천만원씩 5년간 총 21억5천만원을 지원받는다.

김세연 대학정책과장은 "도교육청, 참여 대학과 함께 지역에서 꿈꾸고, 배우고, 머무는 전남 인재육성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겠다"며 "전남 RISE사업, 2곳의 글로컬대학, 17개 시·군의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 창출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道-SK그룹 '사회성과인센티브' 모집

전남도는 1일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산출해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전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지원사업(3기)' 참여 기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023년 3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SK그룹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해 '사회성과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2기 총 22개 사를 선정해 약 1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선정 규모는 약 15개 사다.

선정 기업은 2027년까지 매년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측정해 3년간 SK그룹과 전남도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양시원 기자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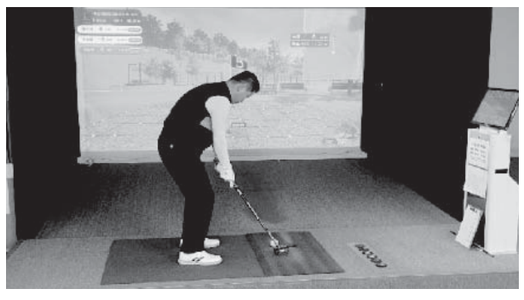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 샵
(골프채, 각종용품, 용구)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